

※ 보도일시 : 2025. 5 30. 오전 11시 이후

AI전환연대 ‘대한민국 AI전환 선언문’ 발표

- 사람 중심 AI, 공공성과 포용성의 비전 제시 -

정치권,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AI전환연대 (공동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는 5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위한 7대 실행계획과 사람 중심의 철학을 담은 ‘대한민국 AI전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정의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국가 AI 컨트롤타워 구축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를 통한 통합 정책·예산 조정), AI 인프라와 데이터 주권 기반 및 AI 산업발전 기틀 마련(AI 컴퓨팅 자원의 공공적 확보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 인재 전략 전환(국내외 글로벌 수준 인재 유치, AI 리터러시 향상 및 대학의 기초과학 교육 강화), 공공부문 AI 전환(행정·복지·교육 전반의 디지털 혁신), 국제 기술외교와 규범 형성 참여(글로벌 AI 윤리 및 협력 주도), 국방·안보 분야의 책임 있는 AI 활용(윤리적 프레임워크와 심의 기구 도입), 포용적 사회 전환 실현(불평등 해소,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 대화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선언문은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 회복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이 선언문은 주로 정치권의 AI산업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와 기업인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활동가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기술 중심의 논의를 넘어

사회적 수용성과 공공성을 담아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기존 정치권이나 정부의 일방향적 정책 제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최초로 초당적인 정치권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AI전환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AI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새로운 질서”라며, “다가올 정부는 선언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AI 전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여정에 적극 참여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AI 전환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AI전환연대’는 정치인, 전문가,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로, 국가 AI·디지털 전략 수립, 정부 디지털 혁신, AI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함께 공동의 전환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25. 2. 24일 출범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회 임문영 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이 공동의장으로, 야당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이 함께 하고, 우리나라 대표적 AI전문가인 박태웅 녹색포럼 의장과 이민석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등 정치인/전문가/기업인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AI전환 선언문은 4월부터 두달 동안, 1차 토론: 사람 중심의 AI와 시민참여 (4월 23일), 2차 토론: AI 산업 생태계와 글로벌 전략 (5월 14일), 3차 토론: 기술 리더십과 정부 역할 (5월 21일) 등 온라인 토론회와 시민해커 및 시민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빠띠 게시판, 메신저 대화방 등을 통해 논의한 끝에 만들어졌다.

※ 붙임

1. 대한민국 AI 전환 선언문
2. 선언문 발표식 현장 사진

대한민국 AI전환 선언문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엔진이자, 산업과 외교·안보·국방,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일자리와 삶까지 아우르는 사회 변혁과 문명 전환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AI는 행정, 교육, 의료, 복지,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AI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함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전환은 어느 누구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나 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예측가능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7대 행동 계획을 통한 AI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전략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합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서 예산과 정책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상설 독립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한꺼번에 이뤄내야 하는 시기이기에 각 부처의 파편화된 추진에서 벗어나 AI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AI 인프라 기반과 AI 기술력 강화, 학습데이터 확보, AI 혁신과 전환 지원 등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대한 실행 플랜을 한 곳에서 마련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론장 마련을 통해 정책 실행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합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AI 인프라와 데이터 주권 기반을 구축하는 등 AI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AI 컴퓨팅 자원의 공공적 확보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AI G3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집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와 컴퓨팅 자원 확보, 민간의 다양한 AI 기술력 확보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지원 등 수요에 기반한 AI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오픈 소스 생태계 기여와 버티컬 AI 산업 발굴을 통해 국내 AI기술력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인재 전략은 단기 교육을 넘어서 인재 확보와 유지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인재확보 없이 성공적 AI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국내 과학기술인에 대한 존중, 박사후 연구자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재외 AI 인재의 귀환을 위한 비자와 재정지원, 대학-산업-연구 간 인력 순환 제도화,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확대합니다. 또한 대학의 수학, 물리학, 인문학 등의 기초학문 교육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공공부문 인력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확충합니다.

넷째,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통한 사회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통해 사회 전체의 혁신을 견인합니다. 행정, 보건, 복지, 교육 등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영역에서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고 실행하며, 부처 간 칸막이 구조를 타파하고, 공공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AI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와 동시에 시빅 해커(Civic Hacker) 및 시민 활동가와의 협업을 제도화하고, 장애 유무,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AI가 진정한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은 AI 윤리, 안전, 인권, 환경지속가능성(RE100 등)에 기반한 글로벌 표준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비영어권 국가들과의

다차원적 기술협력 및 인재교류,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합니다. 이러한 국제 기술외교와 표준 규범 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영향력을 세계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나갑니다.

여섯째, 국방·안보·사회안전 분야의 AI 활용은 윤리적 통제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사이버보안, 감시, 무기체계 등에 AI 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프레임워크와 국내 기준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AI 기술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독립적 심의기구도 구성합니다.

일곱째, AI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기술임을 천명합니다.

AI 전환은 지식의 격차와 부의 불평등, 인권 침해 등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돌봄, 지역의 지속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신뢰 회복, 공론장 형성 등에 기여해야 합니다. 단지 혁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전환으로 만듭니다. AI가 불러올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이 선언문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AI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나침반입니다. 정책 거버넌스, 인프라와 데이터 강화, 인재 확보, 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전환, 국제 규범 주도, 국방 대응, 그리고 사회적 포용이라는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2025년 선거를 통해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이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일관되게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그 여정에 적극 참여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AI 전환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5. 5. 30. AI전환연대

붙임 2. 선언문 발표식 현장 사진





AI전환연대 공동의장

(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회 임문영 위원장

(좌)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